

# 석유價 규제 강화하는 석유소비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영국, 일본등 주요 소비국에서는 중동사태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를 우려하여,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의 가격 규제의 형태는 ①직접규제(프랑스, 이탈리아), ②간접규제(독일, 영국), ③행정지도(일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동사태로부터 각국이 받은 충격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정부는 중동사태 이후 한시적(8월 8일~9월 15일)으로 휘발유 소매가격의 인상을 규제하였다. 프랑스에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지난 1986년에 폐지되어, 이후 석유제품의 소매가격, 중간마진 등은 정유회사의 책임하에 결정되어 왔다. 프랑스 정부의 석유가 규제조치는 중동사태 이후 주요 석유소비국 중 직접 가격통제를 실시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말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3개월간 동결하였으며, 기타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 소비세의 인하 조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석유소비세의 인하가 실시될 경우에 재정부담은 약 4천억 리라(Lire)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인플레이에 대한 이탈리아의 강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간접적 규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독일의 연방 카르텔 사무국은 가격인상의 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5대메이저(Aral, BP, RWE-DEA, Shell)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들 메이저는 특정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독에서는 연방카르텔사무국에 의하여 불공정거래가 감시되고 있을뿐, 전통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연방 카르텔 사무국의 조치는 사실상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

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에서도 중동사태 이후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이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다. 영국의 공정거래국은 5대 메이저(BP, Shell, Esso, Mobil, Texaco)에 대하여, 최근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영국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가 1979년 이후 폐지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이번 조치는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가격규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사태 직후 일본 정부는 원유가 상승의 충격을 석유사들이 자체 흡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9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인상폭은 8~9.2엔/l 정도로서 예상된 것보다 작고, 인상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규제 형태가 다른 것은 중동사태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석유비축량이 적고, 이라크-쿠웨이트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사태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석유비축량은 적으나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독일은 석유비축량이 많고 이라크-쿠웨이트에 대한 원유수입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중동사태의 충격을 적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라크-쿠웨이트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았지만, 석유비축량이 많았으므로 비교적 유가인상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